연합방위태세 강화·전략자산 전개…북에 강력 메시지

한미 정상회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합의
한미연합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
핵심·신흥기술·글로벌 공급망 협력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의 최근 무력 도발을 규탄하면서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 채널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핵'을 못박는 강수를 뒀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양국은 성명을 통해 "(두 정상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의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중단됐다.

성명은 '액션플랜'으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군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하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면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방침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핵' 확장억제에 핵 명시='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을 천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이다. 현재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고자 소형 핵폭탄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매년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이런 표현이 담긴 바 있지만, 정상급에서 이를 명문화하기는 처음이다.

양국 정상이 '핵'을 공동성명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은 최근 북한의 핵 위협 공세 강화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유사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을 한데 이어,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무기는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한다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한미 정상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선제타격 발언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국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한미 '핵 공유' 내지 '주한미군 전술핵 배치' 주장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한미는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를 비롯해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는 '떠다니는 기지' 핵 추진 항공모함, 사거리 2500㎞에 이르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공격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방식도 조만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공급망 동맹 천명…수출통제 협력 강화도 합의=한미 정상은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과 관련, 핵심·신흥기술과 원자력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 정상은 먼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알렸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양자기술·바이오기술·바이오제조·자율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원자력 협력을 위해서는 선진 원자로·소형 모듈형원자로(SMR) 개발, 국제원자력기구추가의정서를 포함해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 참여 등을 꾀하기로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바이든, 文 전 대통령에 "좋은 친구"

못 만난 아쉬움 전화로 달래
문, '철조망 십자가' 선물
"앞으로도 신뢰·우의 지속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차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오후 약 10분간 통화했다.

문 전 대통령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50분께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문 전 대통령은 양산 사저에서 저녁 6시 52분부터 약 10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면서 "퇴임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에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줘 감사하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은 "한국을 아시아 첫 순방지로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 두 사람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한 토대 위에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측은 서로 각별한 안부를 전한 뒤 "앞으로도 신뢰와 우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녹여 만든 '십자가'를 선물했다. 이 십자가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직후 외교부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용서와 화해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만든 것으로, 지난해 박용만 전 대한상의 이사장이 아이디어를 내 만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에 선물한 바 있다. 여기에는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또 김정숙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에게 비단으로 된 무릎담요를, 두 살된 손자에게는 한복을 선물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 선물에 자신이 직접 쓴 편지도 동봉했다.

이날 통화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배석했다. /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인준안 통과에 정호영 복지 정리 수순

국힘 내부서도 "자진사퇴" 목소리
여야 원구성 법사위원장 쟁탈전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당내 다수 의원이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고 있다"고 압박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만큼, 정 후보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자진사퇴' 형식으로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 시절 딸과 아들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 공정 이슈에 민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인 만큼 정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체적인 내부 기류다.

특히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데다 추후 원 구성 등 여야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 임명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 후보자마저 강행했을 때는 '야당 무시' 프레임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공석이긴 하지만 내각 인준 국면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제 원 구성 협상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르면 금주 초부터 양당 간 원 구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우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현재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전반기 원 구성 합의 당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기로 했던 양당 합의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연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꼭 가져가야 한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에 줘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갈 텐데 여야 논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 하반기 국회가 모두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